

평화포럼 정책토론회

남북 평화정책의 방향과 비전모색

2002년 10월 24일

의 동맹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

존경하는 강원룡 목사님을 비롯한 평화포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의 대표자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위해 대선 후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포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 일, 중, 러 등 주변
국은 물론 EU에 대해서까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포럼이 작성하여 각계 인사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이 미국 정부 내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도 높이 평가합니다.

최근 발표한 한반도 보고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은 직접
읽어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

무엇보다도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대선 정국에서
정략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 시민단체와 여야의 중도
적 의원들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신 데 대해서 경
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강원룡 목사님이 들려주신 브란트 독일 수상
의 동방정책 브레인이었던 에곤 바르의 말을 감명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곤 바르는 독일 동방 정책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초당적 협력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절실한 교훈이 아닌가 하고 깊이 공감합니다.

이 토론회가 위기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현 시점의 한반도 정세에 대선 후보들이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 핵 사태 해결의 3가지 기본원칙>

지난 주 미 국무부가 켈리 특사 방북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을 시인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해-협력의 흐름으로 가던 한반도 정세에 난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임하여 그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북한의 핵개발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번 핵 사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정치권과 국민의 단합에 기초하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북한, 우리 국내,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성의를 다하자는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최근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까지 파견하고 남북 관계는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홍콩식의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발표하고 경제개혁 조치를 본격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치 사건을 정면 인정하며 핵 관련 국제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이 이러한 흐름을 뒤집는 듯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인도 안 된 사실이 난무하며 기정사실화 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북한은 조속히 핵개발 시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진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개발 포기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 없이 북한이 원하는 대내외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 야당, 국제사회, 국민에게 호소>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정부와 야당,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이

고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사태 흐름에 피동적으로 대응하거나 주변국에 끌려 다니는 수동적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93년과 같은 민족적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국민적 지지와 여론주도층의 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야당도 민족의 운명이 걸린 사안의 중차대함을 인식하고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도 약속드리겠지만 정략적인 이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에도 호소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93년 한반도 핵 위기 당시와는 달리 북한은 이들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립되어 북미 양자 관계로만 해결해야 했던 과거 상황과는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한국도 한미일 협력체제를 긴밀히 하는 동시에 이들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가 처해 있는 냉전적 현실을 결코 가벼이 보아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직접 피부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곤란에만 사로잡혀 냉전적 현실을 넘어선 저편에 전개되려 하고 있는 보다 넓고 큰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기복은 있었지만 남북 사이에 화해·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북한 핵 사태로 이러한 성과를 순식간에 날려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이란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힘은 바로 희망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번 핵 사태에 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한반도라는 틀에만 머무르지 말고 시야를 넓혀 보다 큰 세계, 동북아시아를 바라보자고 감히 제언합니다.

북한 핵사태가 남북 화해-협력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지만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두운 냉전 상황 저편에는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에 있는 우리가 이 미래를 확신할 수 있어야 북쪽의 동포들도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5원칙>

한반도 평화는 과거의 비극을 청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풍요한 미래를 약속하는 이정표입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아무리 난해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반드시 해결방법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미 저는 대북 정책에서 5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첫째 신뢰우선주의
- 둘째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 셋째 장기적 투자로서의 대북 경험
- 넷째 군사와 경제를 함께 하는 포괄적 안보
- 다섯째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 등입니다.

저는 이번 핵사태를 겪으면서 이 원칙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저께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에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남북 사이에 그동안 쌓여 온 신뢰 없이 핵 문제를 의제로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청와대 회담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초당적 대처에 합의했습니다. 민족 문제에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이는 과거 대선에 없던 크나큰 성과입니다.

대북 경협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문제에 마땅히 한미 협조로써 대응해야 하겠지만 남북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사적 수단에 호소해야 한다는 보수 언론의 논조는 문제입니다. 남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당장 주가 폭락과 외국인 투자 철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안보는 군사만이 아니라 경제도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는 북미가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도 당사자로서 당연히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미, 일, 중, 러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불가결합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6대 과제>

저는 대북 5원칙을 전제로 하며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6대과제도 제시하였습니다.

- 첫째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 셋째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여섯째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 협력체 창설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겠지만 최근 북한 핵 사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만 거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셋째 과제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을 든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남북화해는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데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2003년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 해법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듯이 북한에 군사적 압력만을 가하는 일방적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북측이 핵사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양보를 하고 이에 대해 국제기구, 미, 일, 남측이 대북 지원을 맞교환하는 일괄 타결방식을 실현시키도록 예방외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북 핵사태와 관련해서 핵개발이 사실이라면 우선 이를 중단하고 제네바 기본합의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포괄적 타결이 합의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자세는 삼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중지가 서로 타결되면서 위에 언급한 다음 단계의 포괄적 타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없이 남북 관계만이 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일 수교 교섭도 예정대로 재개되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많으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가능해집니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도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남북 장관급회담은 약속된 개성공단 사업 등에 합의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남북대화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92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핵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래 처음으로 남북이 핵 문제를 의제로 대화를 했습니다. 아직 많이 미흡하긴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남북 사이에 일정한 신뢰가 조성되어 있기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첫째 과제인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도 일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북일 대화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EU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남북 뿐 아니라 미, 일, 중, 러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 창설에 이르는 토대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사안들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들

입니다.

6대과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제 해결이 없이는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란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허황된 장미 빛 꿈이 아닙니다. 이번 북한 핵 사태야말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갈 것인지 냉전과 대립의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판가름하는 기로임을 명심합시다.

<한국의 국내정치와 정책이 동아시아 정세 주도>

이제 대선 일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변화입니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가 동참하고 일본도 북일 정상회담이란 돌파구를 통해 진입해 왔습니다.

비록 북미 관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시 정부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중심 축은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입니다.

만일 대선에서 냉전 회귀세력이 힘을 얻어 이 정책이 뒤집힌다면 다시 한반도 정세는 강대국이 주도하는 과거로 회귀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내 정치야말로 한반도 정세, 동북아시아 흐름을 주도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내 정치는

잘못되면 이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독일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은 첨예한 국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방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란트 수상은 재신임을 받았고 그 뒤를 이은 사민당 정권이 평화 정책을 뒤로 후퇴할 수 없는 정도까지 전진시킨 것이 중요합니다.

당초 동방정책을 반대했던 기민당이 훗날 집권해서 그 정책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10년 이상 동방정책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 차기 정권에서 단절된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 전환기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선에서 엄정한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